

언론이 산업재해를 보도하는 방식에 관한 연구

삼성 백혈병 사태의 경우*

방희경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원용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 연구는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에 초점을 두고, 언론이 산업재해를 보도하는 방식을 살펴 보고자 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5대 일간지, 인터넷 진보언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 경제지 등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사태에 관한 보도 기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를 주장하던 1차 국면에서는 사건을 왜소화(exnomination)하고, 삼성이 ‘보상’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진 하던 2차 국면에서는 사건을 확대(nomination)하고 있었다. 둘째, 언론은 삼성 백혈병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결과와 해결책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셋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해당 사태를 보도하면서 ‘노동자’와 ‘노동 현장’을 지움으로써, ‘반(反)노동 친(親)삼성’ 태도를 견지했다. 넷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사태 전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삭제하고 시장 중심의 담론을 이어가는 면모를 보였다. 삼성 백혈병 사태에 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을 가추적 논증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한겨레,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기업 친화적 자세를 견지하며 원인 규명보다는 보상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책임 소재를 묻거나 따지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산업재해 보도, 삼성 백혈병 사태, 반올림, 가추적 논증

* 본 연구는 ‘한국언론학회 2016년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 huikyongpang@gmail.com, 제1저자

*** yongjin@sogang.ac.kr, 교신저자

1. ‘언론사건’으로서의 삼성 백혈병 사태

2015년 11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이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¹⁾ 이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운동단체 활동가, 인권운동단체 활동가, 언론학자 등이 모였다. 이들의 논의는 ‘삼성 백혈병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삼성 백혈병 사태란 2007년부터 삼성전자(이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백혈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삼성을 상대로 직업병 인정 여부를 놓고 투쟁을 벌여 온 사안을 말한다. 초기 삼성은 발병 원인이 자사에 있음을 부인해왔다. 그러다 서울행정법원이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삼성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를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후부터 사태는 반전되고, 보상을 놓고 긴 줄 당기기를 벌인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를 도운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삼성은 공식 사과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을 두고 반올림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한다. 삼성과 반올림 양 편의 견해는 좀체 좁혀지지 않았다. 이때 반올림에 속해 있던 피해자 가족의 일부가 반올림으로부터 분리해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를 구성해 독자적 목소리를 취하면서 협상은 더 꼬이게 된다. 반올림, 삼성, 그리고 가대위가 독립된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한층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2014년 12월 이들은 한발씩 물러나 이견을 조정할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발족에 동의하기에 이른다. 마침내 조정위는 협상 주체 각각의 의견을 수렴, 조정 절차를 거쳐 2015년 7월 25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한다.

조정권고안이 나오자 그에 대한 언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주요 보수언론과 보수 인터넷 신문, 경제지 등은 삼성에 불리한 권고안이라고 비난했다. 권고안 자체가 졸속이어서 가대위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에게도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올림의 목소리는 삭제되었다. 언론을 통해 삼성과 가대위의 목소리는 살고, 반올림의 소리는 제한되어 나타났다. 삼성은 권고안과는 다른 독자적 보상방법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언론은 삼성에 힘을 실어주며 삼성의 독자적 보상방법이 곧 가대위가 원하는 바라고 부추긴다. 삼성은 언론의 힘을 받아 보상을 실행에

1) 해당 토론회는 2015년 10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방희경이 발표를 맡았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이 사회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환균, (사)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윤여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홍세화,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지도자문위원 임자운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옳긴다. 반올림은 삼성이 조정위의 권고를 위반한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에 따른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언론은 반올림이 8년 만에 찾은 문제 해결의 출구 앞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뉴데일리, 2015, 9, 16; 뉴스핌, 2015, 9, 16; 디지털데일리, 2015, 9, 16; 문화일보, 2015, 9, 7; 한국경제, 2015, 9, 8; 헤럴드경제, 2015, 9, 14 등). 반올림은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보다 ‘삼성 직업병 논란’을 사회문제로 부각시키는 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는 음해성 보도도 서슴치 않았다(미디어펜, 2015, 8, 6; 미디어펜, 2015, 8, 19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바로 ‘그런’-조정위와 반올림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고, 삼성의 결정과 처사에 환호와 찬사를 보내는-언론 활동을 과녁삼아 토론하고 또 비판했다. 삼성 백혈병 사태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이고, 재벌의 부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언론’ 사건이기도 했다는 점에 그날 참석자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토론회 이후, 우리는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를 대했던 방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언론이 일방적으로 ‘친 삼성’, ‘친 기업’ 혹은 ‘친 가해자’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이, 얼마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친 삼성’, ‘친 기업’ 혹은 ‘친 가해자’적 담론을 생산했는지를 알 필요성을 느꼈다. 궁극적으로 ‘친 삼성’ 담론을 펼치기 위해 언론이 어떠한 보도 전략을 이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삼성 백혈병 사태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언론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함께 알고 싶었다. 동시에 피해 노동자를 도운 시민단체인 반올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밝히 고자 했다. 우리는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면 언론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희생자’, ‘사업자’, ‘가해자’, ‘삼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론이 사회적 권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입장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언론의 입장과 태도와 연동하는 대중의 인식 방식까지 사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언론이 ‘산업재해’에 대해 어떤 방향과 태도, 입장을 드러내는 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어떻게 연구문제에 접근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방법론을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는 결국 반올림이 지난 수년간 삼성과의 지난한 싸움을 이어 오면서 ‘진실’을 찾기 위해 이용했다는 방법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기로 했다. 반올림 운동가이자 의사인 공유정옥은 당시 삼성 근로자 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보였던 반올림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011년 7월 1일 가톨릭대 발표).²⁾

정말 맨땅에, 뭐 순서대로 쌓은 것도 아니구요 기왓장부터 오기도 하고 서까래가 나중에 오기도 하고 주춧돌이 맨 끝에 오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하면서 사실들을 (재구성했거든요) …(중략)… 기와 한 장(증거)을 2년 만에 찾았었는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그다음에 요고를 요기 기둥인지 서까래인지 뭔지 몰라서 이렇게도 봐보고 저렇게도 봐봤었는데… 그다음에야 요고를 딱 봤을 때 “그게 되겠냐”라고 “소설 쓰지 마라,” “연금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다른 전문가에게서 들었거든요. …(중략)… 이걸 진짜 못할 짓이다! 누가 하겠냐 이걸! 이걸 집단으로 했으니까, 이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땀 한 톨 안 받고 밤새 공부해가면서 이걸 하셨거든요.

우리 연구자들은 기왓장과 서까래, 주춧돌을 모아 집을 짓고 허물기를 반복하듯, 지상과 3사와 5대 일간지, 주요 인터넷 언론과 경제지에서 관련 기사를 전부 모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반올림의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태의 흐름과 주요 국면을 정리해갔고, 그 국면에서의 언론 보도 경향을 찾아나서기로 기본 가닥을 잡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연구를 ‘연역적(deductive)’이며 ‘실증주의적(positivist)’이기보다, ‘귀납적(inductive)’인 한편 ‘가추적’이며 ‘해석적(speculative)’ 입장이라고 규정지었다. 언론학 등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물론 연역적·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지배적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비판언론학’의 적절한 논증방법이 되기엔 모자람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역적·실증주의적 방법론은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도출하고, 경험적으로 수집된 자료(data)를 근거로 도출된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 가설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의 여부는 해당 가설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의 설명력을 점검, 증명해준다. 이런 점에서 연역적·실증주의적 방법론은 ‘현실(reality)’보다 ‘이론(theory)’을 위한 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는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실천이 될 공산이 크다. 현실(존재)에 관심을 두는 존재론적 접근보다, 현실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하는 인식론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론의 유용성 여부에 있지 않았다. 그보다는 노동 현실, 노동 현장 산업재해에 대한 언론의 태도, 입장,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발생하는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이론을 점검하는 방법론과 인식론이 아닌 현실을 파악하는 방법론과 인식론을 택하였다. 그런 까닭에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이

2) 사실상 이 인용문은 김종영·김희운(2016)의 “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체화된 노동보건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삼성 백혈병 사태에 접근하고 있는 김종영·김희운(2016)의 연구는 공유정옥이 언급한 것처럼 “기왓장, 서까래, 주춧돌”을 모으고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를 반복했다고 말한다(122쪽).

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등의 방법론을 참고로 하되, 그를 설명하는 에너지를 줄여 현실을 점검하는 데에 할애했다.

우리는 사회적 관심과 환호, 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첨단기술 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확인하고, 그 단면과 맞물린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에 더 천착하고자 했다. 그 안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가해자, 그들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그리고 시민단체와 굴지의 기업이 보여준 행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관심을 두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 언론 행위를 현실 구성으로만 파악하려는 적극적 구성주의 또한 비껴가고자 했다. 적극적 구성주의의 경우 언론의 구성 실천이 곧 현실인 것처럼 말하며 실재(reality)를 무시하거나 괄호 쳐버리려 한다. 이 경우도 앞의 연역적 실증주의처럼 실재보다 현실이 구성되는 방식에 더 관심을 보임으로써 존재론보다는 인식론에 에너지를 쓰게 된다. 우리는 노동 현장에서 벌어진 실재는 분명 존재하고 있으며,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그 실재와 실재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실재를 완벽하게 꾸려내는 연구 결과는 불가능하지만 그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며, 폭넓은 경험적인 데이터 수집은 그런 점에서 유용한 추리 수단이 될 거로 확신했다.³⁾

그 수행을 위해 우리는 기왓장과 서까래, 주춧돌을 먼저 모으기 시작했다. 각 언론사의 관련 기사를 모두 모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각 언론사의 보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이러한 특성을 이전의 언론 사건들에 비추어 해석해보았다. 다시 말해,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적 힘(structural forces) 혹은 작동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해석적·사색적인 ‘추리’의 방법을 이용했다. 물론 언론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선형적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태도는 지양하려고 노력했다. 특정 사건의 정체(identity)를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원래부터 별로 없기 때문이다(Grossberg, 1992).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언론이 산재에 대해 드러낸 태도와 입장을 확인했다. 물론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언론에 대해 갖는 특수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이병천·조돈문·송원근, 2008; 이봉수·제정임, 2007; 조돈문·이병천·송원근·이창근, 2014).

3) 이 연구는 비판적 실재론의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을 취한다. 비판적 실재론은 연구대상인 실재는 존재하지만 불완전하게 개연적으로 파악될 뿐이라는 존재론적 입장을 취한다. 이는 실증주의가 내세우는 객관주의를 수정하여 연구결과가 실재에 가까워질 가능성을 지닐 뿐이라고 양보해 말하는 입장이다. 방법론적으로는 다면적인 방법을 종합하여 적절히 해석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같은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을 취한 구체적 연구 방법을 비판적 담론 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라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CDA의 형식을 취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그 분석의 절차와 의의를 따르고 있다.

2. 삼성 백혈병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건수 추이

지난 수년간 신문과 방송이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해 어떠한 보도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기 위해,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와 5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인터넷 진보언론(오마이뉴스, 프레시안), (2015년 토론회에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기타 보수언론 문화일보와 보수성향의 인터넷 신문(뉴데일리, 데일리안, 디지털데일리, 미디어펜), 그리고 경제지(아시아경제, 아주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ZDNetKorea)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사태가 시작된 2007년부터 사건 해결이 논의되고 있던 2015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정했다.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삼성 백혈병”을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했고 각 해의 보도 건수를 알아냈다. 검색된 기사들 가운데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는 기사들을 모두 제외한 결과 각 언론사는 <표 1>과 같은 기사 건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보도 건수를 통해 몇 가지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언론은 2014년과 2015년에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상파 방송 3사 중 SBS와, 5대 일간지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기타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은 2014년 이후에 삼성 백혈병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둘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사태가 2007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이 돼서야 처음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지상파 3사 중 SBS, 그리고 5대 일간지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경제지 등은 2007년 시점부터 2009년까지 낮은 건수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사태와 거의 관련되지 않았다.

셋째, 지상파 3사 가운데 MBC와 KBS, 5대 일간지 가운데 진보언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기타 진보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은 2014년에 가장 높은 보도 건수를 보였지만, 그 이전에도 높은 보도 건수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꾸준히 해당 사태에 관심을 두어왔던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2014년을 기점으로 높은 보도 건수를 보였으나,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그리고 <뉴데일리>, <데일리안>, <디지털데일리>와 <미디어펜> 등의 보수 성향 인터넷 신문들은 2015년에 가장 높은 보도 건수를 보였다.

다섯째, MBC의 경우 비교적 높은 보도 건수를 보이다 2012년부터 보도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는 보수언론과 경제지가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해 적은 관심으로 일관하다가

표 1. 삼성 백혈병 사태 관련 기사 검색 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지상파 3사	KBS	2	9	0	17	21	25	14	49	23	160	
	MBC	2	10	7	32	68	29	8	34	11	201	
	SBS	0	1	0	9	16	8	3	50	27	114	
5대 일간지	보수 언론	조선일보	1	4	1	8	11	21	8	43	11	108
		중앙일보	0	1	0	2	3	4	2	26	13	51
		동아일보	0	0	0	5	5	5	3	18	22	58
	진보 언론	한겨레신문	1	10	16	46	51	51	24	100	43	342
		경향신문	2	3	0	17	24	29	16	57	47	195
기타 진보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1	8	10	26	43	70	51	112	43	364	
	프레시안	3	24	7	102	79	69	50	59	20	413	
기타 보수언론 (문화 일보와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2005년 11월 9일 등록	0	0	0	0	1	2	4	8	20	35	
	데일리안	0	2	0	0	2	5	2	35	38	84	
	디지털데일리 2005년 9월 6일 등록	0	0	0	4	5	2	2	19	26	58	
	문화일보	0	0	0	3	3	4	1	8	19	38	
	미디어펜 2007년 5월 8일 등록	0	0	0	0	0	0	0	11	19	30	
경제지	매일경제	0	3	0	8	7	13	5	58	21	115	
	머니투데이	0	6	0	12	22	26	6	52	24	148	
	아시아경제	0	2	1	12	15	30	8	96	57	221	
	아주경제	0	0	0	8	18	7	4	49	28	114	
	파이낸셜뉴스	0	3	2	2	12	8	1	39	29	96	
	한국경제	0	1	1	2	9	16	4	48	33	114	
	헤럴드경제	0	0	0	4	4	4	2	25	19	58	
	ZDNetKorea	0	0	1	5	6	9	3	37	26	87	

2014년부터 사건보도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왜 이들이 2014년에 적극적으로 사태에 개입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삼성 백혈병 사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보는 일이 절실함을 알게 되었다. 재구성하는 일이 단순히 기사를 검토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떠한 내용들이 보도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사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야 보도 건수의 변화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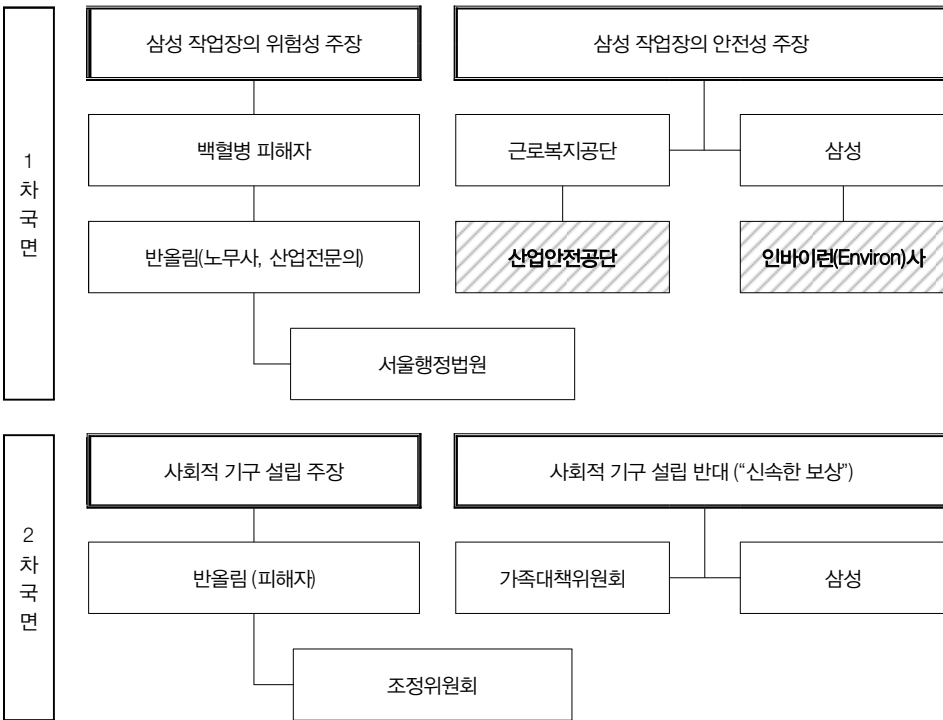
이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언론기사, 반올림의 활동일지, 인터뷰를 통해 그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런 다음 2014년에 보도 건수가 급증했던 SBS와 보수언론, 그리고 경제지의 기사 내용을 사건 초기부터 검토하여,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삼성 백혈병 사태를 보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는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의 언론이 어떻게 ‘친 삼성(기업 혹은 가해자)’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3. 사태의 두 국면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사태를 전면 재구성해 보기로 했다. 사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는 가장 높은 보도 건수를 보이고 있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의 진보언론을 참고하였다. 이들 진보언론은 2~400건 정도의 보도건수를 보이며 사태에 대해 더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었다. KBS와 MBC는 각각 160건과 201건이라는 높은 보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접 취재한 심층보도 기사보다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는 단신보도가 많았고, 각 시간대에 동일한 뉴스를 반복 보도했다. 2015년에 벌어진 사건들에 관해서는 언론 비평지 <미디어스>와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참고했다. 당시 발표된 조정권고안에 대해서는 왜곡된 기사가 많아 미디어 비평지의 가이드를 필요로 했다. 또한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와 권영은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실시(2016년 5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관련된 법원 판결문 등 참고자료를 이용했다(<부록> 참고).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사태 흐름을 정리하면서 삼성 백혈병 사태가 크게 두 개의 국면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태는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반올림과 삼성의 대립구도 속에서 이어져 왔으나, 1차 국면과 2차 국면에서 그들 사이의 논쟁의 주제와 역할이 달랐다. 1차 국면에서는 백혈병 피해자와 반올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삼성, 전문 연구 집단이 사건의 중심에 선다. 이 국면에서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의 외면과 삼성의 방해 속에서 ‘현장 중심의 지식’을 구성해간다. 한 연구팀은 이를 두고 반올림이 삼성과 벌인 “지식정치”(김종영·김희운, 2013)라 불렀는데, 바로 이 지식정치 국면에서는 반올림이 주도해 나갔던 것이다. 2차 국면은 2014년 삼성이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을 두고 반올림과 협상을 벌이면서 시작된다. 2차 국면에 이르면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는데, 반

그림 1. 삼성 백혈병 사태 각 국면의 쟁점과 주요 행위자들



올림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족들이 만든 가대위, 삼성과 반올림이 합의하여 출범시킨 조정위가 새로운 두 주체다. 이들은 2차 국면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다. 이때 1차 국면에서 적극 활동을 벌였던 근로복지공단과 연구 집단, 그리고 법원은 후방으로 밀려난다. 각 국면에서 주요 역할을 맡으며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행위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간략히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1) 1차 국면: 직업병 여부 논쟁

사건의 시발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 황유미 씨는 삼성 백혈병 사태에서 최초로 인식된 피해자다. 황씨는 삼성 기흥 공장에서 반도체 제조 업무를 맡았다.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기술 산업일 뿐 아니라, 매연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을 없앤 ‘청정산업(Clean Industry)’으로 환영 받았었다. 미세한 먼지 한 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클린룸(clean room),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둘러싼 토끼복장 방진복(防塵服) 등은 청정산업이 만들어낸 깨끗하고 안전한 노동공간의 상징이었다. 그런 상징

적 공간에서 2년 근무했던 황씨가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다. 피해자 유가족(이하 피해자)은 황씨 외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 후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황씨의 백혈병을 직업병이라고 추정한다. 그들은 곧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금을 신청한다. 바로 이 행위가 '삼성 백혈병 사태'의 계보학적 시초가 된다.

사업자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시설의 결합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부상, 질병,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로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산업재해보험제도(이하 산재)이다(이희자, 2010).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노동자는 국가기관의 심사 그리고 인정을 거쳐야 한다. 반도체 산업처럼 업무상의 위험요소가 '불확실성(uncertainty)'을 띠는 경우, 국가기관은 전문가 혹은 과학자의 견해에 의존해 노동자의 피해 사실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한다. 황씨 가족으로부터 산재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에 삼성 작업장 안전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이듬해인 2008년 산업안전공단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삼성 작업장에서 백혈병 유발 물질(벤젠,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황씨의 죽음이 산재가 아니라며 불승인 판정을 내린다.⁴⁾

산재 현행법은 피해의 원인규명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린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이미 확인된 질병의 경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 스스로가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백혈병처럼 희귀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충분한 연구 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한다. 혹은 노동자 스스로 작업환경의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의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이 노동자에게 피해의 원인규명의 책임을 전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산재 "선평가 후보상" 방식(이종란, 2009)은 노동자들을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로부터 배제시키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⁵⁾

시민단체 반올림은 이러한 사업자 중심의 지배질서,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2007년 삼성 백혈병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노무사, 산업의학

4) 정부기관은 질병의 원인을 찾는 데에 환경적·직업적 요소들보다 개인적 행위의 특성이나 유전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Brown, 2007; 이영희, 2012).

5)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2009)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산재로 인정하는 "선보상 후평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및 보건의학 전문의를 주 구성원으로 반올림이 만들어졌다. 반올림은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사실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삼성에 반도체 공정에 이용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삼성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했다. 반올림은 직업병 해외 사례를 추적하는 우회로를 택한다. 해외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제조공정의 특성상 다량의 유해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미국 첨단산업의 본산인 실리콘밸리에서도 반도체 제조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가 림프계암, 위장관계암, 골격계암 등 혈액암과 뇌종양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다(Smith, 2008).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 높은 자연유산율을 보여준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 일본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도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직업병이 이미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첨단기술 산업의 작업환경을 미화시켰던 클린룸은 화학물질이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고, 방진복도 노동자들의 체모, 피부, 땀으로부터 반도체 마이크로 칩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임도 드러났다. 반올림은 반도체 산업 현장이 얼마나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에 위협적일 수 있는지에 주목했다.

해외 직업병 사례 조사와 함께 반올림은 피해자의 평소 생활습관, 가족력을 추적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삼성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현직 근로자들로부터 작업환경과 근무조건에 관한 제보를 받기 시작한다. 전·현직 근로자의 제보는 반올림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팀별 생산량 경쟁과 짝 짜인 제품생산일정으로 작업장에서 안전표준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안전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접수되었다. 반도체 공정에 이용되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은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처럼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백혈병 피해는 물론이고 유산, 불임, 생식독성 등 다른 질병의 피해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노동자들은 교대근무로 인해 주야가 뒤바뀌는 불규칙한 생활을 해야 했고, 장시간의 노동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외부 위험요인에 취약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이 고수해 온 ‘무노조 사업장’ 원칙이 노동자의 권익과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반올림이 삼성 작업장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면서 사태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삼성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선다. 삼성은 2009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근로복지공단의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당사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국가기관(근로복지공단)과 동조 관계를 유지하며 노동자와 맞서는 풍경을 연출했던 셈이다. 2010년에는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삼성반도체 이야기’)를 이용해 백혈병 발병이

삼성의 작업환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홍보를 폈다. 언론사 기자들을 초대하여 공장견학을 실시하기도 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이 2명의 백혈병 피해자에 대해 산재 판결을 내렸을 당시에도, 삼성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어 미국에 본사를 둔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런(Environ)사에 작업장의 안전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고용과학”을 동원하여 작업장의 안정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김종영·김희운, 2013).

반올림은 백혈병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와 가족 병력, 그리고 전·현직 근로자들의 ‘현장경험’을 통해 얻어낸 지식들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반올림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행정법원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를 직업병 피해자로 인정했다. “(위험 요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백혈병 발병의 경로가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상 질병’은 …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 사실들을 통해 ‘추단’될 수 있을 때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1997년 산재보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방희경, 2014). 반올림은 산업안전공단이나 인바이런사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에 의존하기보다, 노동자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시민지식”(lay knowledge)을 구성해 지식정치 국면에서 작은 승리를 일궈 냈다(김종영·김희운, 2013, 2016; 이영희, 2012).

2) 2차 국면: 보상 방법 논쟁

1차 국면에서 형성된 반올림과 삼성의 대립구도는 반올림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의 백혈병 사례 산재 인정 판결 이후, 2014년 5월 삼성의 권오현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에 이른다. 보상을 통해 곧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삼성은 이어 반올림과 함께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협상을 본격화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성이 ‘보상’의 방법을 제안하면서 반올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반올림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주장해왔다. 반올림은 보상 담론을 제시하면서 노동자들의 연대를 유도하고 그들을 세력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삼성이 새로운 방식의 보상 방법과 절차를 제안하면서 노동자 연대에 기반을 둔 반올림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삼성은 보상 방법에 ‘배제와 차별’의 논리를 담았다.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 도중 교섭단에 참여한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추후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삼성은 이전부터 노조 설립 방해 과정에 활용했던 방식을 재활

용한다.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직후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고용불안의 공포가 증대된 사실을 배경으로, 삼성은 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는 노동의 신축화에 동의하게 한 바 있다. 삼성은 일부의 노동자를 하위 동맹자로 포섭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 연대를 무력화시켰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한다. 삼성은 산재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갈등의 시간을 배경으로, 차별적·배제적 보상 방식을 제시한다. 차별 논리는 불안과 압박감을 야기한다. 결국 반올림 협상단에 소속되어 있던 8명의 피해자들 중 6명은 '신속한 보상'에 동의하며, 가대위를 발족하고 독자적 노선을 걷게 된다.

남아 있던 피해자 2명과 반올림 활동가들은 삼성의 제안에 맞섰다. 교섭단 참여 여부로 보상의 내용이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올림의 노무사, 변호사가 대리를 맡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를 거치고 있던 피해자가 39명 더 있었고, 법정 소송에서 직업성 인정여부를 다투고 있던 피해자도 10명이나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제안대로 8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해버리면, 삼성은 다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논의를 얼마나 더 지연시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반올림, 2015. 11. 15). 결국 피해자 측은 분열되고 말았다.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가대위와, 차별 없는 보상을 주장하는 반올림으로 나뉘었다. 이로써 노동자 연대는 사건의 피해자로, 시민단체에 동조하는 일원으로, 그렇게 쪼개졌다. 이로써 제 1국면에서 발생한 직업병 여부에 관한 논쟁은 제 2국면 보상 방법에 관한 논쟁으로 옮겨간다.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과 관련된 협상에는 삼성과 가대위, 그리고 반올림이 참여한다. 의견조율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들은 조정위 설치에 동의한다. 2014년 12월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가 출범한다. 2015년 1월, 조정위는 삼성, 가대위, 반올림을 조정 절차의 독자적 참여 주체로 초대하여 각각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수집한다. 그 후 조정위는 약 6개월의 숙고 기간을 거친 후, 2015년 7월 23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조정권고안은 보상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었다. 첫째, 삼성에게 1천억 원 기부를 제안했고, 둘째,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구인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보상 업무와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했다. 사과와 관련해서는 삼성 전자가 직업병 피해가족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집단적·개별적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건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취지의 '노동건강인권 선언'을 발표하도록 했다. 적절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조정위는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등의 의제를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형태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의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회적 기구의 설

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조정위는 사회적 기구를 통한 보상방식이 보상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계속적”이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그리고 “법적 안정감” 있게 해결·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기구는 반도체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사회적 기구를 통해 보상 업무가 이루어지면, 피해사례 기록이 남게 되고, 이러한 기록 자료는 사후 대책에 이용될 수 있다. 사회적 기구는 보상 업무뿐 아니라, 옴부즈맨을 임명하여 삼성의 안전보건 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다. 현재에도 반도체 공정에는 다량의 독성물질이 이용된다. 하지만 안전관리 문제가 여전히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점(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3, 3, 4)을 고려하여,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안전문제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조정권고안이 발표된 후 협상의 주체 가운데 반올림이 가장 먼저 권고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보상 수준이 부족하게 책정된 점을 감안, 그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적 기구 설립 제안은 삼성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반올림이 반도체 공정에 이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요구했을 때에도, 삼성은 ‘영업비밀’을 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정위가 제안한 사회적 기구의 설립은 삼성의 비공개 전략에 시비를 걸고 있었던 셈이다. 이때 가대위가 조정권고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가대위는 사회적 기구의 설립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보상이 지연되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삼성은 가대위의 견해에 동의 의사를 표하며, 조정위가 제안한 사회적 기구 설립에 반대 의사를 내놓았다.

삼성은 사내에 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를 설치해 보상 절차를 진행시키고, 사내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스스로 재발방지대책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모든 문제를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서 풀어내고자 했다. 동시에 이 모든 결정이 가대위가 ‘보상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3일 삼성은 자사의 뜻대로 사내 보상위를 발족한다. 보상위는 2015년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상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기간은 전략적으로 제한되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압박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삼성의 보상창구를 이용할수록 보상위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접수기간을 제한하는 전략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였다. 보상위는 스스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했다. 유산, 불임 등 생식독성 피해자와 퇴직 후 10년 이후 발병자, 1년 미만 근무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사가 수락한 피해자들에게만 보상하는 차별적 방식의 보상을 실행했던 것이다. 이렇듯 삼성은 보상 문제를 자사의 편익에 따라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사태를 개인적이

고 미시적 차원의 문제로 점차 축소시켜 나갔고, 궁극적으로 보상 문제를 피해자 당사자들과의 “신속한” ‘거래’로 만들어버렸다.

삼성이 제시한 방식의 보상은 반도체 산업 작업장의 ‘위험성’ 담론도 축소·삭제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보상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피해 규모와 경로를 기록하고, 반도체 산업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삼성이 보상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그 기대와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보상 집행에 관한 일체의 정보가 은폐되어 재발방지대책이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자, 반올림이 삼성의 독자적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15년 11월 반올림은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반올림은 삼성에게 진정한 사과,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상,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에 의한 외부감사’라는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효과가 없지는 않아 2016년 1월 삼성이 옴부즈맨 제도에 합의한다. 하지만 삼성이 지난 9년간 보여준 행보를 고려해, 반올림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2016년 5월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삼성 백혈병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4. 언론의 두 국면

지금까지 삼성 백혈병 사태가 9년간 이어져오면서 두 개의 국면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1차 국면에서는 백혈병 피해자의 직업병 인정 여부를 두고 반올림과 삼성이 대립했고, 2차 국면에 들어서는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의 방법과 절차를 두고 그 두 주체가 대립했다. 이 두 개의 국면을 <표 1> 삼성 백혈병 사태 관련 기사 검색 건수에서 도출한 다섯 가지 특징들과 겹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언론이 가장 많이 보도를 한 2014년은 삼성의 대표 권오현이 사과를 하며 국면을 전환시킨 시점이다. SBS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기타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은 반올림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보인 1차 국면에서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지만 삼성이 사과하고 나선 이후의 2차 국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보수언론과 경제지가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한 2010년은 삼성은 기자들을 초대해 공장견학을 실시하는 등 홍보 전략을 펴기 시작한 때다. SBS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경제지 등은 그 이전까지 한두 건의 보도 건수를 기록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셋째, 다른 언론들이 2014년에 가장 높은 보도 건수를 기록한 것과 달리, 〈동아일보〉와 〈뉴데일리〉, 〈데일리안〉, 〈디지털데일리〉, 〈문화일보〉, 〈미디어펜〉 등 보수 성향이 짙은 언론들은 2015년에 더 많은 보도를 한다. 이들은 삼성이 조정권고안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제안한 보상 방법과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넷째, KBS와 MBC,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그리고 기타 진보언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1차 국면과 2차 국면 모두에서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사태에 대한 KBS와 MBC의 보도량은 방송국 내부 사정과 관련되어 보인다.

다섯째, MBC의 보도 건수는 2012년부터 확연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는 해당 사태의 흐름과의 관련성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MBC 경영진의 노조 통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12년 김재철 사장이 취임 이후 이어진 MBC의 보도부, 시사담당부, 노조 등에 대한 통제·탄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특징들 가운데 우리는 첫째와 둘째, 셋째 특징에 주목하기로 했다. SBS와 보수언론, 경제지의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넷째와 다섯째 특징은, 진보언론과 KBS가 비교적 사태 전반에 일관된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MBC의 보도 건수의 추이는 언론사의 내부 사정을 반영하고 있어 별도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SBS와 보수언론, 경제지의 보도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국면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1차 국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식: 삼성의 복화술

SBS와 보수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경제지 등은 사건 초기 진보언론에 비해 보도 건수가 확연히 낮았다. 이처럼 언론이 사태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태도를 보인 탓에, 이 문제는 7년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대중의 시선에서 배제되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SBS는 오직 1건, 〈조선일보〉 5건, 〈중앙일보〉 1건, 〈동아일보〉는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물론 이런 비판으로부터는 진보언론 〈경향신문〉도 자유롭지 않다. 〈중앙일보〉에서 유일하게 보도한 1건의 기사는 사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다. SBS와 〈조선일보〉는 삼성에 유리한 내용만을 추려 보도했다. 예를 들면, 2008년 산업안전공단이 반도체 산업 여성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림프종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를 당시, SBS와 〈조선일보〉 등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높은 림프종 발병률을 보이지만) 백혈병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림프종과 백혈병은 모두 ‘혈액 암’의 테두리 안에 있어, 림프종 발병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백혈병 발병 위험에도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09년 서울대 산학협

력단(백도명 교수)이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보수언론들은 이에 대해 입을 닫았다.

SBS와 보수언론, 경제지는 사태를 외면해 오던 삼성이 서서히 홍보 활동을 펴기 시작한 2010년부터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해당 연도에 SBS는 9건, <조선일보>는 8건, <중앙일보>는 2건, <동아일보>는 5건, 경제지 대부분은 8~12건 등을 기록했다. 그 이전까지 거의 보도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비교적 높은 수치다. 그런데 해당 연도의 기사들은 대부분 삼성이 언론사 기자들을 초대하여 공장 견학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삼성 반도체 공장은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추후 삼성이 공개한 작업장은 (백혈병 피해자들이 근무했던 생산라인이 아니라) 최신 설비를 갖춘 곳이었고, 공장 공개 시간도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추가 보도는 없었다. 언론은 해당 사태를 삼성과 반올림 두 주체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로 파악하지 않았고, 삼성의 독자적 행보에 초점을 두었다. 사태 초기부터 반올림은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 사실을 주장했지만 언론은 입을 닫아 반올림의 주장에서 힘을 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언론은 삼성이 침묵하면 침묵을 지켰고, 삼성이 목소리를 내면 그를 거울처럼 반영했고,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같은 해 SBS는 삼성의 조수인 사장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가 밝힌 백혈병 관련 “의혹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도했다(2010, 4, 15). <조선일보>의 경우 삼성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개설하여 작업장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공장라인을 공개한 것을 “침묵에서 ‘소통’으로”의 태도 전환이라고 보도했다(2010, 4, 13). 이어 <동아일보>는 삼성이 ‘삼성전자 건강연구소’를 설립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2010, 7, 14). <중앙일보>는 삼성이 “세계적인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런(Environ)사에 역학 조사를 의뢰해 관련 의혹을 해결할 것이라고 알렸다(2010, 7, 16). 사태 초기에는 입을 닫았던 언론이 겨우 입을 떼기 시작했지만 삼성의 무릎 위에 앉은 복화술 인형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다.

삼성에 유리한 내용이 아니고는 급격하게 말을 아꼈던 보수언론과 경제지가 누락시킬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듬해 2011년 서울행정법원이 두 명의 백혈병 피해자(황유미 씨, 이숙영 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당시 총 다섯 명의 피해자 소송 중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에게 산재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인 승소판결이었으나,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산재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언론에 의해 단숨에 비틀어지고 퇴색된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행정법원이 다른 세 명에게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판결의 의의를 축소했다. <조선일보>는 산재를 인정받은 두 명의 피해자가 “기흥사업장의 … 가장 낡은 설비를 갖추고 있는 3라인”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 사례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명백히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추단”한 것이어서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라고 보도했다(2011, 6, 26). 2013년 백혈병 피해자 김정미 씨의 산재가 인정되었을 당시에도, <조선일보>는 “김씨가 충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재판부가 산재로 판결했다고 보도했고, 삼성이 보호 장비 관리의 책임을 유기했다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25명도 산재 신청을 냈는데 … (심사가 진행 중인 4건과 취하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0건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임으로써, 계속해서 판결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종합하면, 1차 국면에서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과 경제지들은 해당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삼성이 서서히 홍보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삼성이 불편해 하던 피해자와 반올림의 목소리는 철저히 부재한 것으로 취급했고, 자사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삼성의 목소리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 따라서 삼성은 모든 관련 기사 문장의 주어로 배치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삼성과 손을 잡고 노동자에 대응했던 국가기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책도 책임도 묻지 않았다.

언론이 보여준 ‘친삼성’적 태도는 언론에 대한 삼성의 통제 권력이 얼마나 거대한 것 인지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삼성은 한해에 2조 8천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연합뉴스, 2014, 1, 27) 국내 최고의 광고주로 군림해왔고, 재정적으로 삼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언론이 이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봉수와 제정임(2007)은 삼성과 현대, 두산, 한화 등 재벌 그룹의 비리 사건과 관련한 광고량 변동을 추적하면서 한국 언론의 재벌 관련 보도와 광고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언론의 ‘친 삼성’ 태도를 광고로 모두 환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론의 정치적 보수성 역시 노사 간 갈등에서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추론도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적 보수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동함은 MBC의 보도 건수에서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 권위주의적 정권의 진입 이후 방송 노조가 방송 경영진과 대립하다 경영진 측으로 힘이 쏠린 다음, MBC의 보도 건수는 초기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를 예시라도 하듯, 대구 MBC <시사플러스>의 경우, 삼성 백혈병 사태 초기에 취재를 시작했으나 취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경영진으로부터 취재 중단을 통보 받아 제작과 방송을 포기했다고 한다(한겨레, 2010, 2, 25). 최대 광고주 삼성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 그에 보태어 언

론의 정치적 보수성,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이후 언론의 정치적 보수화(김상균·한희정, 2014; 원용진·홍성일·방희경, 2008; 이기형·황경아, 2016)가 겹치면서 삼성 백혈병 사태 보도는 점차 (자본과 국가) 권력 편향적인 모습을 띠어 갔다.

하지만 삼성의 언론 통제 권력과 언론의 권력 편향적 성향만으로 삼성 백혈병 사태의 보도 방식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태의 2차 국면으로 눈을 돌려, 언론이 사태를 보도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추가적으로 드러냈는지 살펴보면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한 윤곽을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2차 국면 보도 방식: 삼성과의 공명(resonance)

2차 국면에서 SBS와 보수언론, 경제지 등은 1차 국면에 비해 많은 보도 건수를 보이기 시작한다. SBS는 사건 초기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만을 보도했으나 2014년과 2015년에 77건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보도한 건수는 그 이전 5년간의 기사 건수의 두 배가 넘는다. 기타 보수언론 <문화일보>와 <미디어펜>, <디지털데일리>, <뉴데일리>, <데일리안> 등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14년 초기에 보도된 기사는 당시 클라우드 펀드 방식으로 제작 되어 개봉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를 다루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5월 14일 삼성 대표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공개 사과를 다루었다. SBS는 “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보상 관련 입장 전문”을 보도하기도 했다(2014.05.14). 삼성은 사과 이후, 반올림과의 협상을 본격화하고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언론은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은 삼성의 움직임에 주목했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삼성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받아냈다. 이런 현상은 앞서 제기한 문제와 같은 맥락 속에 있어 보인다. 삼성이 움직이면, 언론도 같이 움직이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언론이 이처럼 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국면의 전환’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삼성 백혈병 사태는 삼성 작업장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두고 반올림과 삼성이 대립되었던 1차 국면과, 보상 방법을 두고 반올림과 삼성이 대립되었던 2차 국면으로 구분된다. 이때 1차 국면은 ‘지식정치’로 특징지어진다. 1차 국면에서 반올림은 노동자들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의학적·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은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했다. 산업안전공단과 인바이런서와 같은 전문가 혹은 과학자 집단 행위자들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들을 발표했다. 그런데 언론은 전통적으로 ‘지식정치’ 과정에서 유능한 주체가 되질 못했다. 한국 언론이 과학적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해석 능력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강명구·김낙호·김학재·이성민, 2007; 박재영·전형준·이규연·이진영, 2008; 원용진·전규찬 외, 2006). 2006년 ‘황우석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에도 언론은 황우석 교수가 전달하는 보도 자료를 받아 적었을 뿐, 보도 자료를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삼성 백혈병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론은 입을 닫고 과학 전문 보도에서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는 노고를 거치지 않았다. 그랬던 언론이 2차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해당 국면이 삼성의 사과를 계기로 지식정치가 막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2차 국면의 논점이 ‘보상’의 내용과 방법, 범위, 시간에 관한 대중적 의제에 모아지자 이러한 사안을 대중적 용어로 전달하기에 분주해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지만 삼성도 이에 맞추어 ‘대중정치’를 시작한 상황을 읽을 수 있다. 공식적 사과, 신속한 보상, 협상 등과 같이 전에 없던 제스처를 연출하며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삼성의 적극적 해결 입장을 전하려 했다. 물론 언론은 그를 충실히 전달하려 했다. 삼성이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나섰고, 언론은 삼성의 결정에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삼성은 나름의 보상 방식을 제안했으며, 언론은 삼성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삼성의 뜻을 옹호했다. 삼성이 제 뜻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도 제거해주었다. (삼성 of the 보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반올림의 허점을 캐고 이를 부각시켰다(디지털데일리, 2014, 4, 16; 문화일보, 2014, 4, 16; 미디어펜, 2014, 4, 16). 반올림이 늘 삼성과의 협상에서 사태의 해결을 막는 장본인인 양 보도했고, 반올림이 내부 분열을 일으켜 가대위가 출범되었다고도 강조했다(디지털데일리, 2014, 8, 20; 문화일보, 2014, 9, 2; 미디어펜, 2014, 9, 3). 실제 삼성은 공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즉 언론에 대한 접근 능력에서 반올림에 비해 우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은 자신의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여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접근할 수 있다. 자신의 담론을 공적 담론으로 만들 수 있는 삼성의 능력이 삼성 백혈병 사태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마치 삼성의 대중정치에 대한 추론을 뒷받침 하듯,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삼성과의 협상 초기에는 삼성의 법무팀과 인사팀 임원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으나, 권오현 대표의 사과 이후 커뮤니케이션팀 임원이 협상팀을 구성하여 나왔다”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협상팀이 커뮤니케이션팀 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삼성이 ‘지식정치’나 ‘법적 대응’에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이용하는 대중정치로 초점을 옮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계속해서 임변호사는 2014년 삼성의 사과 이후 ‘경제지’, 즉 경제부 기자들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나섰다고 진술했다. <표 1>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1차 국면에는 종합일간지가 사태에 주목했고, 일간지의 노동부와 사회부 기자들이 사안을 보

도했다. 그러나 2차 국면에 들어서는 1차 국면 동안 거의 완벽하게 침묵을 지켰던 경제지들(〈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ZDNet Korea〉 등)이 적극적인 플레이어(player)로 나서기 시작했다. 삼성의 적극적 홍보 전략이 실제로 있었는지, 혹은 언론이 묵시적 공동 행동을 보인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삼성 백혈병 사태의 2차 국면에서는 삼성에 출입처를 두고 있는 경제부 기자들이 대거 등장해 ‘친삼성’ 담론을 펼친 것만은 사실이다.

2015년 7월 25일 조정권고안이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보수언론과 경제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표 1>에서 보면 〈테일리안〉과 〈디지털데일리〉, 〈문화일보〉, 〈미디어펜〉 등이(삼성의 사과가 있었던) 2014년보다(조정권고안이 제시된) 2015년에 더 많은 보도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조정권고안이 제안한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공적 책임’, 즉 “사회적 부조에 따른 근본 해결”이라는 조정위의 근본 문제의식을 설명하지 않았다.⁶⁾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조정권고안이 가대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줄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비난했고, 또 그 내용조차도 바람직한 기업환경을 저해할 뿐이라고 기술했다. 조정위가 제안한 사회적 기구가 설치되면 삼성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한 조정권고안이 산재법의 근간을 흔들고 법질서를 위협한다고 설명했다.⁷⁾ 삼성과 언론의 공명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조정위가 삼성에게 1천억 원의 기부금을 출자하여 이중(70%를 보상재원으로 이용하고) 30%를 사회적 기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기금의 무려 30%”를 “단순 소멸성 자금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2015, 7, 15). 〈조선일보〉는 2015년 조정권고안이 발표되었을 당시, 1천억 원이라는 기부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놓았다.

그 요구 액수로 보면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인 참사로 규정한

6) 공영방송 KBS도 공적 책임의 의의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데에 그쳤고, MBC는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MBC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검색해 본 결과, MBC가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보도한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7) 조정위는 보상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보상 문제를 ‘공공선(公共善)’을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산재법의 보상 방식은 노동자에게 피해의 원인규명의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였다. 조정위는 현행 산재법이 기반을 두는 경험적 증거의 원리가 갖는 모순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적 인과성(업무와의 연관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정위는 보상을 “법률적·사전적 의미에서의 ‘보상’과는 다른”, “회사가 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차원의 위로금’으로 의미화했다(미디어오늘, 2015, 7, 31).

셈이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실종된 사람은 304명이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사람은 57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자살자 1명을 포함해 21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나 법원에서 산재임을 인정받은 사례는 7명이다. 이들에 대해 조정위는 세월호 참사 수준의 ‘사회적 부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 기업에 대해 마치 ‘호구’를 만난 듯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런 환경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조선일보, 2015, 7, 25)

이 기사는 삼성이 “백혈병에 … 대해 …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표명”한 것은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일 뿐,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은 바람직한 기업환경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에는 인간 하나하나가 평등하게 존엄하다는 생각이 부재하며, 노동자들이 입는 피해가 기업의 운영과 성장에 비해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보는 믿음이 내재해 있다. 바로 이러한 시각은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보다 기업의 자유를 우선시한다. 한국 사회에 상존하는 위험은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기업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이 노동자의 인권 침해 위험보다 더 위중한 것이라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조정권고안이 발표된 후, 반올림을 비롯해 산업보건, 화학물질 관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심을 가져온 국내외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단체 등이 권고안의 취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⁸⁾ 하지만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이런 내용을 축소 해석했다. 피해자의 또 다른 축인 가대위가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거부한다는 점을 더 강조하며 의미를 줄여나갔다. 조정위는 사회적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으나, 이는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가대위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산될 것이라고 예상 보도하기도 했다(문화일보, 2015, 7, 24; 서울파이낸스, 2015, 8, 6; 아시아경제, 2015, 7, 24).

이후 삼성이 조정위가 권고한 기부금을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언론은 일제히 삼성의 1천억 원 출연이라는 액수를 부각시켰다. 삼성이 “통 큰 결단”을 통해 문제를 해

8) 한국산업보건학회, 민변 노동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성명한 의견서가 발표되었고, 이 외에도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몰라서 용감했던 시대, 이제 끝내야”(〈미디어오늘〉), 김주일(좋은기업센터 소장)의 “삼성전자의 공익재단 설립이 기대되는 이유”(〈경향신문〉),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삼성전자의 ‘통 큰 결단?’”(〈한겨레〉), 김명희(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황유미 씨 사망 8년… 삼성, 조정권고안 수용해야”(〈프레시안〉), 정태인(갈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시사인〉), 하종강(성공회대 교수)의 “직업병 보상과 예방, 3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한겨레〉) 등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

결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했다(SBS TV, 2015, 8, 3; 조선일보, 2015, 8, 4; 중앙일보, 2015, 8, 4; 비즈니스포스트, 2015, 8, 3; 서울파이낸스, 2015, 8, 6; MTN, 2015, 8, 4). 삼성이 “피해자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보상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고도 보도했다(헤럴드경제, 2015, 8, 4). 사실상 삼성은 권고안의 핵심내용인 사회적 기구의 설립을 거부하고 사내에 독자적 보상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지만. 언론은 삼성이 권고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결론지었다(SBS, 2015, 8, 3; 미디어펜, 2015, 8, 6; 이데일리, 2015, 8, 3). 언론은 전문가들이 보상위를 두고 있다는 점과 삼성이 협력사 직원들과 퇴직자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조정위는 단지 사건의 조력자일 뿐이고 사건의 당사자는 삼성임을 부각시켰다(동아일보, 2015, 9, 14; 데일리안, 2015, 9, 13; 머니투데이, 2015, 9, 13; ZDNet Korea, 2015, 9, 13).

반올림이 삼성의 일방적인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자, 언론은 반올림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성 보도를 쏟아냈다. 반올림이 몽니를 부리며 8년 만에 문제 해결의 출구를 찾은 삼성 백혈병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반올림이 삼성이 제안하는 보상 방식에 제동을 걸고 조정위가 제안한 사회적 기구의 설립을 옹호하는 것은 반올림이 가진 비밀스런 계획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삼성출연금 중 30%로 사회적 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반올림 활동가들이 그 기구를 운영할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올림 측은 때로는 과격하거나 불필요하게 지나”친 “투쟁 방식으로 종종 협상을 난항에 빠뜨린 경험이 있다”고 공격했고(시사포커스, 2015, 7, 28), 시민단체가 “이권에 눈이 멀어” 보상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사회적 기구의 설립을 고집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미디어펜, 2015, 8, 6).

결국 삼성은 사내 보상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상 절차를 밟아갔고, 언론은 사태가 무리 없이 해결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기술했다(뉴데일리 2015, 9, 21; 문화일보 2015, 9, 23; 미디어펜, 2015, 9, 23; 비즈니스포스트, 2015, 9, 18; 서울경제, 2015, 9, 17; 시사포커스, 2015, 9, 13; 아주경제, 2015, 9, 23; 천지일보, 2015, 9, 23; 파이낸셜뉴스, 2015, 9, 17; ZDNet Korea, 2015, 9, 23 등). 언론의 조력 덕분에 삼성은 자기 주도하에 보상 문제를 주도할 수 있었다. 반올림은 이를 문제 삼아 삼성 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언론은 반올림의 농성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뉴데일리, 2016, 5, 3). 삼성 반도체 사업부 퇴직자 모임인 ‘반도체를 사랑하는 모임(반사모)’의 문상영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반올림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엔진을 ‘죽음의 산업’으로 … 억지 주장을 … 펼”친다는 보도도 이어졌다(전자신문, 2016, 5, 9). 이러한 언론의 보도 경향은 삼성 백혈병 사태의 2차 국면에서 삼성의 대중정치가 펼쳐졌다는 추정에 신빙성을 더한다.

5. ‘노동’과 ‘노동 현장’이 빠진 산업재해 보도

삼성 백혈병 사태는 제대로 공론의 의제가 되지 못했다. 소수의 언론에 의해 공론화 노력이 있긴 했지만 대중의 시선 안으로 들어와 충분히 논의되는 과정에 도달하진 못했다. KBS <추적60분>은 “나는 일터에서 암을 얻었다”(2010, 5, 9), “삼성 ‘직업성 암’ 논란 다시 불붙다”(2011, 1, 26), “끝나지 않은 악몽, 반도체 직업병 논란 확산”(2011, 11, 30) 등, 사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정치의 수하에 들면서 그 같은 노력도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언론이 그를 외면하거나 일방적으로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공론 의제로서 힘을 잃었다. 공론장의 문지방을 넘기 위해 반올림은 수년간 삼성과의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며 기자회견과 취재 요청을 벌였다. 성명서를 작성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였지만 사태는 사회적으로 크게 공론화되지 못하고 대중의 시선에서 배제되었다. 반올림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추모제와 1인 시위, 거리 퍼포먼스, 서명운동, 증언대회 등을 이끌어 직접 공론장에 들어서려 했지만 소수의 언론만 그를 다룰 뿐이었다. 언론의 공론 역할에 회의가 생기면서 노동자의 죽음과 직업병 문제로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한 연극, 영화, 도서가 대중담론의 확산을 꾀하기도 했다.

삼성 백혈병 사태에서 한국의 언론은 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 피해자의 바람대로 공론이 되지 못했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 둘 정도로 언론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품은 채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언론은 사태 전반에서 삼성 편향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1, 2차 국면으로 나눌 수 있는 사태에서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 외면 혹은 왜곡, 편향을 거듭했다. 사태의 원인을 추적하는 1차 국면에서 SBS와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전반적으로 침묵과 외면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간헐적으로 사태를 보도했지만, 삼성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그를 중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보상을 논의

표 2. 삼성 백혈병 사태를 대중담론으로 확산시킨 연극, 영화, 도서

- 연극: <반도체 소녀>(2010).
- 도서: <삼성반도체와 백혈병>(2010),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2011), <사람 냄새>(2012), <먼지 없는 방>(2012) 등.
- 영화: <탐욕의 제국>(2014) (다큐멘터리 영화), <또 하나의 약속>(2014) (클라우드 펀딩으로 만든 극영화).

하는 2차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보수언론, 경제지는 사태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섰다. 삼성의 방식을 옹호했으며 그 뜻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보도를 일삼았다. '왜곡'된 보도도 서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언론은 1차 국면에서 침묵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왜소화(exnomination)시켰고, 2차 국면에서는 대거 보상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사건을 확대(nomination)했다. 그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편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빈번했고, 심지어는 보폭을 맞추는 장면까지 연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잠재적 피해자, 예상 피해자 모두가 원했던 공론장 역할은 고사하고 그들을 더욱 위협에 몰아넣을 사건 무마, 축소, 왜곡까지 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둘째, 언론은 삼성 백혈병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결과와 해결책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1차 국면에서 비교적 침묵했던 언론이 제 2국면에 접어들면서 적극성을 띤 데는 삼성의 홍보 전략과 언론의 보도 관행이 맞물렸기 때문인 듯 보였다. 언론은 광고 수익의 절실함 때문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을 시작한 2차 국면의 시점에 적극성을 띠었을 수 있다. 동시에 언론이 산업재해, 노동문제 등을 다루면서 원인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경향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 전반에 걸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여준 진보언론까지도 노동자의 피해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보다는, 삼성과 반올림의 협상과 보상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전에도 언론은 재해, 재난, 위협을 보도하면서 원인을 따지기보다 뒷마무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적 대참사였던 세월호 침몰 당시에도 공영방송 KBS조차 참사 첫날 보상금 액수를 보도한 바 있다(뉴스타파, 2015, 5, 11). 물론 이 같은 결과(해결책) 중심의 보도 관행은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면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쟁의 강도가 커지고 경기순환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대중은 사회적 실존에 대한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며 더욱 즉각적인 기회에 세속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게 된다. 무한 경쟁의 늪에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대중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자신의 삶으로부터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일보다, 문제의 해결과 보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중의 관심을 반영해 언론이 선택한 '뒷마무리' 중심의 보도가 삼성의 의도와도 일치했다는 점이다. 결과에 치중한 언론은- 때론 본의 아니게- 삼성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론 물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셋째, 언론은 해당 사태를 보도하면서 '노동자'와 '노동 현장'을 지움으로써, '반(反)노동 친(親)삼성' 태도를 드러냈다. 언론은 노동, 노동자, 노동문제, 산업재해를 다루는 나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듯 보였다. 1차 국면에서 반올림과 노동자 연대가 백혈병 피해를 주장하는 동안, 언론은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와 '노동'의 의미를 삭제하고 축소시켰다. 삼성의 작은 움직임에도 주목했지만, 삼성의 '노동 현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합 조직의 부재로 노동자가 철저히 개별화되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지만, 언론은 노사 간 대립으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노동현장에 존재하는 위험성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2차 국면에서도 ‘노동자’ 주체를 강조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를 우연한 위험을 당한 ‘피해자’로 치환하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은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가 모여 구성된 반올림이 가대위와 반올림 두 개의 주체로 쪼개진 것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고, 반올림을 사건과 무관한 조직으로 끌어내리고 축소시켰다. 가대위가 만들어지자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반올림은 제3자로 규정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지닌 조직으로 폄하했다. 언론은 투명한 보상을 통한 직업병 원인 규명과 재발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올림을 무시와 적대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속한 보상, 그리고 발 빠른 해결을 먼저 해내고, 직업병 원인과 재발 방식은 차후에 해내자는 반노동 담론은 산업재해, 위험을 접할 때마다 언론이 펴는 상습 어구가 되어 버렸다. 물론 그 같은 상습 어구를 구사한 탓에 산업재해 같은 노동 문제에서 언론은 사용자 측의 담론에 적극 동조하거나 말려가는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넷째, 언론은 사태 전반에서 국가(혹은 실질적 관련자인 정부)를 빼놓고 시장 중심의 담론을 펴는 면모를 보였다.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국가기관 근로복지공단이 벌인 편향적 행태에 대해서도 언론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어 스스로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 책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산재법에 대해서도 언론은 비판하지 않았다. 누구나 노동자가 되고, 시민 모두가 노동자이거나 잠재적 노동자이며, 누구든 산재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사업자의 편에서 있는 형국에 대해서도 언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은 1, 2차 국면에서 반올림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시 혹은 적대적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노동과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아닌 시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개별 기업의 문제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노동 문제에 개입하는 시민, 지식인, 시민사회단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노동 문제를 당사자 간의 계약문제로, 산업재해를 시장 내 문제로만 축소하고 있었다. 노동의 문제, 산업재해 문제의 사회성보다는 개인성을 강조하는 언론 성향을 보여주었다.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한 진실과 그를 생성해낸 구조는 연구 너머에 실재한다고 우리는 전제했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 그리고 인터뷰와 기사를 통해 얻은 사건일지는 그에 다가가기 위한 경험적 자료이거나 추론된 사건일 뿐이고 그 실재적 진실을 다 말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경험(experience)적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태를 진실에 가깝게 구성한 잠재적 현실에 지나지 않았다. 구성된 잠재적 현실로부터 연구 너머에 있는 사태의 본말을 추적하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수집된 경험으로 가추한 성과물이다. 경험을 수집하고, 그 경험을 해석해 현실을 구성해보고, 그 구성 속에서 본말을 가추하

는 논증과 방법을 취하였다. 익숙지 않은 논증이긴 했으나 이 연구가 겨냥한 것은 삼성 백혈병 사태에 임했던 언론의 보도 방식과 그 연유였기에 그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설명한대로 비판적 실재론에 입각한 언론 보도에 관한 연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럼으로써 비판 언론학에서 긴 시간 동안 실종되었던 보도의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도 풍성해지길 바라본다.

참고 문헌

- 강명구·김낙호·김학재·이성민 (2007). 애국적 열망과 숭고한 과학: 진실추구를 억압한 저널리즘.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59-90.
- 김상균·한희정 (2014). 천안함 침몰 사건과 미디어 통제: 탐사보도 프로그램 생산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66호, 242-272.
- 김중영·김희운 (2013). '삼성백혈병'의 지식정치: 노동보건운동과 현장 중심의 과학. <한국사회학>, 47권 2호, 267-318.
- 김중영·김희운 (2016). 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109호, 113-152.
- 박재영·전희준·이규연·이진영 (2008). 황우석 사건의 교훈: 기자들은 무엇을 배웠으며 과학보도는 어떻게 변했다고 인식하는가?.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226-253.
- 방희경 (2014). 행위자-관계망 이론으로 재구성한 '삼성반도체 작업환경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 추단할 수 있는 단서들 수집 vs. 부재 증명. <언론과 사회>, 22권 2호, 64-110.
- 손미아 (2009).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발생에 대한 이해. <정세와 노동>, 50호, 72-81.
- 원용진·홍성일·방희경 (2008). <PD 저널리즘: 한국 방송 저널리즘 속 '일탈'>. 서울: 한나래.
- 원용진·전규찬 외 (2006). <신화의 추락, 국익의 유명: 황우석, <PD수첩> 그리고 한국의 저널리즘>. 서울: 한나래.
- 이기형·황경아 (2016).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역할과 성취 그리고 명과 암을 맥락화하기: 텍스트 분석과 미디어 생산자연구를 통해서 조명하기. <한국언론정보학보>, 75호, 83-142.
- 이병찬·조돈문·송원근 (2008).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 서울: 후마니타스.
- 이봉수·제정임 (2007). <경제저널리즘의 종속성: 한국 신문의 재벌 보도와 광고와의 관계>. 한국언론재단.
- 이영희 (2012). 전문성의 정치와 사회운동: 의미와 유형. <경제와 사회>, 93호, 13-41.
- 이종란 (2009).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의 진실과 과제. <정세와 노동>, 44호, 21-26.
- 이희자 (20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노동법학>, 36호, 475-505.
- 조돈문·이병찬·송원근·이창곤 (2014).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후마니타스.
- Smith, T., Sonnenfeld, D. A., & Pellow, D. N. (Eds.). (2006). Challenging the Chip: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global electronics indust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공유정옥 외 역. (2007).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 서울: 메이데이.
- Grossberg, L. (1992). *We gotta get out of this place: Popular conservatism and postmodern culture*. New York: Routledge.

부록

• 삼성 백혈병 사태를 이해하는 데에 이용된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3, 3, 4).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 화성 공장,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 드러나”.
- 김성희 (2012). <먼지 없는 방: 삼성반도체 공장의 비밀>. 파주: 보리.
- 김수박 (2012). <사람 냄새: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파주: 보리.
- 김태윤 (감독) (2013). <또 하나의 약속> [영화]. 서울: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서울: 에이트볼픽 처스.
- 민주언론시민연합 (2015, 8, 14).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URL: http://www.ccdm.or.kr/aboard/?act=bbs&subAct=view&bid=ccdm_broadcast_01&pa
- 박일환·반올림 (2010).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서울: 삶이 보이는 창.
- 반올림 (2015, 11, 15).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 방희경 (2015, 11, 15). <삼성 반도체 직업병 조정권고안 언론보도의 문제점>.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토론회 발표문.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주최.
- 서울행정법원(2011. 6. 23. 선고, 2010 구합1149 판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등.
- 서울행정법원(2013. 10. 18. 선고, 2013 구합51244 판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임자운 (2015, 11, 15). <최근 반올림 관련 보도의 쟁점과 실제>. ‘보도를 통해 본 삼성의 언론지배’ 토론회 발표문.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주최.
- 홍리경 (감독) (2012). <탐욕의 제국> [영화]. 서울: 푸른영상.
- 희정 (2011).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서울: Archive.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 보고서 요약본. 서울: 한국 산업안전공단.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amsunglabor>).
- 삼성반도체이야기 홈페이지 (<http://www.samsungsemiconstory.com>).
-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2015, 8, 10). 현 단계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의 입장.
- 삼성전자 (2015, 8, 16). 삼성전자 입장문.
- 연합뉴스 (2014, 1, 27). “삼성전자, 연간 광고비 2조 8천억 원”. URL: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1/24/0302000000AKR20140124130100008.HTML>

The Media Coverage of Industrial Disaster in Korea

A Case of Samsung Workers' leukemia

Huikyong Pang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Media & Culture, Sogang University

Yongjin Won

Professor,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Korean media has covered the leukemia case of Samsung workers. The news articles on the cases, published in the three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the five major newspapers, progressive Internet news media, conservative Internet news media, and business newspapers between 2007 and 2015, were retrieved and analyzed. Four characteristics of news reports were discovered as following: First, while conservative news media and business news media have exnominated the first phase of the case in which a civil organization Sharp claimed that Samsung workers had leukemia from their workplace; they have nominated the second phase of the case in which Samsung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by compensating the victims for their disease. Second, the media generally have displayed more interests in the results than in the causes of the case. Third, the conservative press and business newspapers have reported the case in favor of Samsung rather than laborer victims. Fourth, the conservative press have deployed market-friendly discourses, rather than problematizing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rough an abductive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except *the Hangyore* and *Kyunghyang Shinmun*, most of the Korean media, assuming pro-business attitude, do not question or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ustrial disaster lies by displaying their interests in the phase of solution, not in the phase of cause.

KEYWORDS The Media Coverage of Industrial Disaster, Leukemia Cases of Samsung Workers, Sharp, Abductive Analysis